

교토의정서 대응 의견수렴 “막차”

기후변화 국제세미나 개최 ... 2005년 발효 앞두고 의무부담 제기 전망

외교통상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으로 10월27-28일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국제세미나 및 민관포럼을 개최한다.

기후변화 국제세미나 및 민관포럼은 최근 교토의정서의 협상 동향을 알리고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를 초대해 교토의정서 체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.

10월27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, 국제에너지기구(IEA) 등 국제기구 전문가와 미국, 유럽연합(EU), 중국, 말레이시아 등 선진국, 개발도상국 협상대표들이 교토의정서 이후 체제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각국의 입장을 발표하고, 10월28일에는 국내 관련부처, 연구기관, 학계, 재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한국의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한다.

교토의정서는 최근 러시아 행정부가 비준안을 의회에 상정함으로써 2005년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한국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제1차 공약기간(2008-2012년)에는 온실가스 저감의무를 갖지는 않지만 2005년부터 시작될 선진국의 제2차 공약기간(2013-2017년) 온실가스 저감의무 부담 협상과정에서는 OECD 국가이자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의무부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.

<화학저널 2004/10/26>